



관과 안기부장도 지냈다. 당시 차기 주자를 그로 한다는 소문이 있었을 정도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이 전 실장은 비서실장 전후로 국토통일원 장관과 외무부 장관을 지냈다. 고건 전 총리도 전두환 정부에서 내무·교통·농수산부 장관을 거쳤다.

노태우 정부는 내무부 장관과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이상연 전 안기부장, 노동부·체신부 장관을 거친 최영철 전 통일원 장관 등이 두각을 나타냈다. 김영삼 정부에선 재경원·통상산업부 장관과 재경원·해양부·과기처 차관 출신의 임창열 전 경기도 지사가 1위였다. 통일부 장관 두 차례에 국정원장까지 지낸 임동원씨와 재경부·기획예산처 장관에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전윤철 현 감사원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관운을 자랑했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은 고위직을 지낸 이는 진념 전 장관(7회)이었다. 임창열 전 지사(6회), 고건 전 총리, 오명 부총리, 나웅배 전 부총리(5회)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9년3개월) 대통령을 보좌한 비서실장, 소리 없는 실력자, 경제사령관인 대통령의 참모장’.

1969년 10월부터 78년 12월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청와대 생활을 함께한 김정렴 당시 비서실장을 일컫는 말이다. 이전에 그는 재무부·상공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에서 고위 정무직을 가장 많이 지낸 인사다.

장·차관을 직업처럼 자주 하

는 인사들이 있다. 한 정권에서 두 번 이상 지낸 이들만 해도 박정희 정부에서 85명, 전두환 정부에서 51명이나 된다. 김영삼 정부 이후엔 38→27→7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박정희 정부 시절 ‘단골 장관’에는 내무부 장관 세 차례와 교통·체신부 장관을 지낸 박경원씨, 상공·건설·동자부 장관을 한 장에 준씨가 포함됐다. 전두환 정부에선 노신영 전 총리와 이범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경우다. 노 전 총리는 외무부 장관

등이 다음이다.

**대통령 모교 출신 '잘 나갔다'**

**집권 때 임명 비율 높아**

경북고는 노태우 전 대통령, 경남고는 김영삼 전 대통령, 부산상고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교다. 이들 학교는 출신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은 공직 엘리트를 배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북고 동문으로는 당시 정해창 대통령 비서실장, 서동권 안기부장, 김우현 치안본부장, 서영택 국세청장 등이 있다. 최측근 박철언씨는 체육청소년부 장관과 정무제1장관을 지냈다.

김영삼 정부 시절 경남고는 경기고에 이어 장·차관 배출 2위(8.8%)였다. 당시 박희태·안우만 법무부 장관과 김광일 대통령 비서실장, 김광석 대통령 경호실장 등이 김 전 대통령과 동문이다. 재임 동안 검찰총장(김기수), 경찰청장(박일용), 국세청장(추경석) 등 핵심 자리에도 이 학교 출신이 임명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모교인 부산상고 동문 중엔 윤광웅 국방부 장관, 성운갑 관세청장, 조영동 전 국정홍보처장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 지역 출신이 중용됐던 시기엔 당연히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의 고위직 진출이 활발했다.

목포상고를 나온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공고를 나온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교 동문 대신 출신 지역에 있는 학교를 끌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중 광주고에선 경기고에 이어 둘째로 많은 정무직(6.2%)이 배출됐다. 당시 안주섭 대통령 경호실장, 안정남 국세청장, 오점록 병무청장, 심상명 법무부 장관 등이 이 학교를 나왔다. 조선대 부속고는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으로 공직 엘리트(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를 배출했다. 목포고(신승남 전 검찰총장)와 문태고(천용택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도 부쩍 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엔 이규호 당시 대통령 비

서실장이 졸업한 진주고가 3위로 급상승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엔 경남고 외에 부산·동래·통영고가, 노태우 정부에선 경북 사대부고가 공직 엘리트 배출 순위를 올렸다. 현 정부에선 서울·광주·용산·전주·이화여고 등이 약진했다.

**장·차관 등용 창구 크게 넓어져**

**공직 엘리트, 그들은 누구**

5공 말기인 1987년 문교부 장관에 임명된 서명원씨는 입각하기 전까지 대부분 교육 관련 기관을 거쳤다. 이화여대·서울대 교수, 충남대 총장, 문교부 사무차관, 교육개혁심의위원장 등이 그의 주요 경력이다.

이에 비해 올 6월 취임한 장하진 여성부 장관의 경력은 다채롭다. 충남대 교수와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 국회제도분과위원을 지낸 뒤 한국여성연구소장, 한국여성개발원장을 거쳤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도 지냈다. 대학·정당·시민단체·청와대·정

## 기획특집 6

부 위원회 등과 두루 관계를 맺은 것이다.

취재팀 조사.분석에 따르면 공직 엘리트들이 경력을 쌓는 기관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두환 정부 이후 488→760→822→1085개로 늘었다. 거치는 기관의 종류도 교육계와 군.법조계 등은 줄어들고 정치권.시민사회단체 등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고위 관료의 배출 창구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 장관 지름길 부처는=역대 장관 다섯 명 중 한 명은 정부 기관에서 경력을 쌓았다. 고시를 거쳐 전문 관료로 성장해 부처 수장에 오르는 게 일반적인 통로이기 때문이다. 취재팀 분석에선 특히 청와대.재무부.경제기획원.내무부(과거 기관명)에서 근무한 인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장관에 진출했다. 임명권자와 가까이 있거나 경제 및 종합행정을 중시한 때문으로 보인다.

박정희 정부 장관 가운데 10

명 중 한 명은 대학에서, 또 다른 한 명은 군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다. 사회의 각 분야가 터를 잡기 전이라 어느 정도 검증돼 있는 교수나 군인 등에서 공직 엘리트가 수혈됐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수록 이 같은 분야는 급감하고 정치권 출신이 많아졌다(박정희 정부 7.2%→김대중 정부 19.1%). 진입이 힘들긴 하지만 일단 국회에 입성하면 장관으로 선택될 확률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아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천정배 법무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한국여성단체연합(한명숙 전 환경부 장관)처럼 과거 주요 경력기관에 들지 않았던 기타 단체의 비율은 박정희 정부보다 현 정부에서 24%나 증가했다.

◆ 수도권 출신 비율 증가세=영.호남 격차가 크게 줄면서 장.차관의 출생지별 비율은 공직자들이 출생한 시기의 인구 비율과 비슷하게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 참조>

서울.경기 지역 출신은 14.2%(박정희 정부)→19.4%(현 정부)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직까지는 386 이후 세대가 고위 공직자에 대거 진출할 연령대가 아닌 점과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등을 고려하면 향후 이 지역 출신의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 지역은 김영삼 정부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정권으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 때 15~16%의 점유율을 보이긴 했으나, 현 정부에선 인구비율보다 낮은 상태다. 강원 지역도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는 곳이다. 박정희 정부 때는 이북 지역(18%)이 영남에 이어 둘째로 많은 장.차관을 배출했다.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실제 개각 인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출생지이고 그 다음이 대학이었다”며 “인사 실무자 가운데 고교 동문을 과도하게 챙기는 경우가 있어 문제 삼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연, 학연 등을 따지지 않고 해당 자리의 책임자를 고르는 인사 원칙을 세워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출신 장·차관**

**YS 시절 67%서 현 정부 들어 46%로**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를 배출하는 창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특정 인맥이 끼리끼리 밀고 끌어주던 폐쇄적 구조가 개방형·다원형으로 바뀌는 중이다.

우선 서울대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 66.8%이던 서울대 출신의 비율이 현 정부에선 46.3%까지 하락했다. 특정 대학 출신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는 양상이다. 본지 취재팀이 박정희 정부 이후 차관급 이상 공직자 1635명을 분석한 결과다.

군사정권 때 서울대에 이어 둘째로 많은 고위 공직자를 낸 육군사관학교는 문민화 이후 급감해 현 정부에선 4.9%에 불과하다. 반면 고려대와 연세대

는 노태우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육사의 공백을 메우면서 각각 5.4→15.1%와 2.1→6.6%로 늘어났다. 하지만 두 학교도 현 정부 들어 상승세가 꺾였다.

서울대의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점유율 상위 4개 대학(서울대, 육사, 고려대, 연세대)의 비율도 김영삼 정부 때 81.7%에서 현 정부 68.8%로 줄어들었다.

낮아지는 진입 장벽의 틈새를 파고드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7명의 차관급을 배출해 점유율 5위에 오른 성균관대가 대표적이다.

이화여대(장하진 여성부 장관 등), 전남대(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등), 영남대(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 등)도 김대중 정부 이후 상승세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졸업한 경상대 등 처음으로 장·차관을 내는 지방대도 많아졌다.

장관이 되기까지 거친 경력도 다채로워지고 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장관들이 직위에 오르기까지 적을 둔 기관은 모두 460곳이었다. 교육계, 군, 법조

계 등이 주를 이뤘다. 김대중 정부 장관들은 두 배가 넘는 1085개 기관을 경력으로 갖고 있다. 소속했던 기관의 성격도 달라져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가 대폭 늘었다. 직업이 다양해지고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세지면서 공직 엘리트의 공급처도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신지 편중 역시 완화되는 추세다.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정무직을 차지하는 현상이 개선되고 있다. 영남 출신은 김영삼 정부까지 42~43%가량을 차지하다 김대중 정부에서 25.6%로 떨어진 뒤, 현 정부에서 36.3%를 기록했다. 호남은 10% 초반에서 김대중 정부 때 27.5%로 오른 뒤 현재 25% 수준이다.

평균 50대 중·후반인 고위직들이 태어난 1925~49년의 정부 집계에 따르면 영남의 인구 비율은 29~33%, 호남은 25~26%가량이다. 현 정부에 이르러선 인구 비율에 상당히 근접해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